

## 특집 논문

#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

임미리 \_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2016~2017년 촛불집회의 특징이 비폭력뿐 아니라 준법 시위에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집회 공간을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폭력 배경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비폭력-준법 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저항의 제도화와 지배세력의 균열로 인한 전선의 변화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전선에서는 지배세력의 균열로 공권력이 자제·후퇴했고, 추상적 전선에서는 균중의 폭력적 열기가 소멸하는 한편 전선의 변화로 박근혜 1인을 제외한 적이 비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비폭력과 준법은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분을 없애면서 광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을 건 투쟁의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광장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비시민들을 광장에서 배제해 버렸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동시에 선사했다. 여혐 논란으로 가시화된 여성주의 전선은 단일한 대오에 균열을 초래했지만 서로 다른 전선의 접합 가능성도 보여줬다. 또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한 광장은 기존의 파편화된 도시하층민을 배제하긴 했으나 다양한 전선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의 깃발이 진입할 여지도 열어놓았다.

■ **주요어:** 2016~2017 촛불집회, 물리적 전선, 추상적 전선, 여혐 논란, 도시하층민

DOI: <http://dx.doi.org/10.31008/MV.41.1>

## 1. 서론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전개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비폭력-평화’를 이유로 국내외에서 큰 찬사를 받으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고원의 『촛불 이후: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촛불 참가 대중을 “쾌(快) 시민”이라 부르며 집회의 유쾌함과 발랄함을 낚은 “적대성의 정치”와는 다른 “공감성의 정치”라고 평가했다(고원 2017, 26-36). 그러나 비폭력-평화 시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았다. 노형일·양은경은 주류 언론의 담론 실천이 대중적 감정의 표출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케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폭력-평화가 가능했다고 해석했다(노형일·양은경 2017, 5). 또 서영표는 촛불집회의 출발점이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이었고 우익 언론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적인 ‘시민’과 폭력적인 ‘비시민’을 가르는 언론프레임이 정치의 주체인 광장의 시민을 방관자로 주변화했다고 분석했다(서영표 2017, 65). 또 이항우는 2008년 촛불집회를 연구한 논문에서 폭력 대 비폭력 논란과 관련해 지도부에 해당하는 ‘광우병쇠고기국민대책회의’의 위로부터의 프레임이 집합행동의 정치적·실천적 상상력을 제약했다고 밝혔다(이항우 2012, 244). 한편 천정환은 집회의 비폭력-평화를 장점이자 한계로 보면서 “직접적이고 거대한 비폭력 평화행동”을 가능하게 한 촛불의 자유주의와 다양함은 “광장 너머 세계에서의 연대의 취약함과 불가능함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천정환 2017, 460).

촛불의 비폭력-평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급진성의 탈각과 관련돼 있다. 억압폭력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의 폭력, 즉 저항폭력에는 금지의 타파나 기성질서의 전복과 같은 급진성 또는 혁명성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촛불집회의 비폭력이 체제 안주적 속성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촛불의 비폭력-평화를 급진성의 탈각과 연결해 보는 시각에서조차 전대미문의 규모가 갖는 ‘혁명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건에서 동시에 읽히는 보수성과 혁명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수적인 현실태와 혁명적인 잠재태의 경합으로 봐야 할까, 또 다른 의미를 찾아봐야 할까.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연구가 지난 촛불집회의 성격을 무엇으로 판단하건 간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비폭력’과 ‘평화’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저항폭력은 억압폭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폭력시위와 평화시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지난 촛불집회는 억압폭력에 대한 저항폭력<sup>1)</sup>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불법도 없었다. 언론에서는 이 모두를 아울러 비폭력-평화 시위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비폭력과 준법(또는 합법)은 별개다. 역대 대규모 대중시위가 비폭력으로 전개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수 참가자의 비폭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차량의 파손과 같은 폭력이 일부 발생했던 2008년

1)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을 말한다.

촛불집회는 차치하더라도 2014년 세월호 집회는 어떠했는가? 다음 해인 2015년 4월 18일 연좌농성 중인 유가족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차벽을 훼손하는 폭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의 나머지 집회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발견하기 어려웠다.<sup>2)</sup> 지난여름까지의 홍콩 시위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의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긴 했지만, 반대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없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리고 최근까지의 홍콩 시위를 평화시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2016~2017년 촛불집회와 세월호 집회나 여름까지의 홍콩 시위가 갖는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한 11월 12일 3차 집회 뒤로는 폭력뿐 아니라 여하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데 있다. 반면 세월호 집회 때는 시위대의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공간을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인 적이 있었고, 홍콩 시위에서는 공항 점거행위가 불법으로 간주 돼 당국의 연행 시도가 있기도 했다. 지난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연행자 수 '0'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상 처음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지만, 부상자나 연행자는 한 명도 없었”고, “경찰 차벽을 타고 만들어진 꽃담장<sup>4)</sup>은 비폭력의 상징이자 절제된 분노

- 
- 2) 연구자는 2014년 세월호 집회부터 연구 대상인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집회에 참가했으며 인터넷 정당인 데모당 소속으로 매번의 집회에서 공권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 이 글에서 집회 양상을 묘사한 내용 가운데 참고 문헌이 없는 것은 모두 연구자의 직접 경험에 해당한다.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자의 페이스북에 기록돼 있으나 별도로 주석을 달지는 않았다.
- 3) 홍콩 시위는 이후 경찰의 발포와 사상자 발생으로 저항세력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의 표출”이었다는 보도(MBC 2016/12/31)는 폭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체의 불법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기에 더해 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고 경찰 차량에 붙였던 스티커도 도로 떼어낼 정도로 질서 유지와 공동도덕, 공권력에 대한 배려가 민주시민의 덕목으로 요구된 장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사회 대규모 대중시위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비폭력을 시민불복종론이나 비폭력 저항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이관후의 경우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 빗대 지난 촛불집회를 해석했는데 같은 논문에서 저자 스스로 밝혔듯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대규모의 특정한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지배 체제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관후 2017, 48)이다. 하지만 지난 촛불집회는 언급한 대로 폭력뿐 아니라 일체의 불법도 없었다. 즉 박근혜 1인에 대한 반대를 외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수반되지 않았고, 지배 체제의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불복종도 없었다.

두 번째, 대중시위의 저항폭력은 공권력과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 기존 연구는 폭력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위대의 폭력 또는 비폭력을 일면적으로 해석했다는 한계도 있다. 홍콩 시위만 보더라도 초기의 비폭력 분위기는 공권력의 강제진압이 시작되면서 급변했다. 경찰이 최루탄에 실탄까지 발사하자 시위대 역시 불화살과 화염병으로 맞

---

4) ‘꽃담장’은 시민들이 경찰 차량에 꽃무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 스티커는 이후 시민들의 손에 의해 다시 떼어내졌다. 이유는 집회 뒤 경찰들이 스티커를 떼어내느라 고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섰다. 기존 연구가 집회 군중의 비폭력을 고양된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긴 신자유주의와 보수 언론에 포섭된 결과로 보긴 억압폭력과 저항폭력이 대결하는 장에서 비폭력의 배경을 저항세력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쾌시민들이 벌인 축제의 장’ 같은 달라진 시위 문화가 비폭력을 가져왔다고도 하지만, 이는 전도된 해석이다. 집회의 문화적 장치는 사회운동의 레퍼토리<sup>5)</sup>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비폭력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력적 저항이건 비폭력적 저항이건 문화적 요소는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축제의 장’이라는 표현처럼 광장 전체로 전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비폭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폭력의 배경은 공권력이라는 억압폭력과 관계에서 분석해야 한다. 대중시위를 통한 저항이 다른 유형의 저항과 갖는 차이는 공권력의 유무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 파업 현장이나 다른 저항 공간에도 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파업 현장의 공권력이 노조의 반대편에 선 사측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국가권력을 의미한다면, 대중시위 공간의 공권력은 적 자체가 된다. 다시 말해 파업 현장에서 공권력은 국가권력이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과 자본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여러 계층·계급이 참여하는 대중시위는 대체로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저항행위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권력은 국가권력의 상징으로서 적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중시위의 특성이 공권력에 있는 만큼 그 공간도 공권력과

---

5) 최재훈은 사회운동에서 레퍼토리를 “사회운동 세력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의 방식”으로 설명했다(최재훈 2017, 68).

의 관계에서 구분해볼 수 있다. 대중시위에서 폭력이 나타날 경우 공권력과 대치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도 역대 대중시위에서 저항세력의 폭력은 두 공간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시위 공간을 공권력과 대치를 기준으로 나눠 공권력과 저항세력이 대치하는 공간을 물리적 전선, 그렇지 않은 공간을 추상적 전선으로 명명하고 각각에서 비폭력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기존 연구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 배경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누적된 계급 분노가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별개의 전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노한 시민들에게 적이 박근혜와 주변 세력이라면, 계급 분노가 겨냥하는 적은 집권 세력 전반 또는 통치 체제 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 전자와 후자가 포함관계에 있더라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 반 박근혜 전선이라는 보수적 현실태의 이면에 반 신자유주의 또는 반 자본, 반 재벌 같은 혁명적 잠재태가 있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전자는 가시화됐는데 후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또 지난 촛불집회가 비폭력-평화 시위였다면 그것과 두 가지 분노의 가시화 및 비가시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촛불집회의 특징이 비폭력뿐 아니라 준법 시위에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집회 공간을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폭력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계급 분노가 대규모

참가의 배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시화되지 못한 이유를 비폭력-준법 시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해보겠다. 이 과정에서 지난 촛불집회가 갖는 보수성과 혁명성도 동시에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대중시위의 두 가지 전선과 두 가지 폭력

대중시위 공간은 공권력과의 대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공권력과 대치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물리적 전선, 후자를 추상적 전선으로 명명했다. 우선 물리적 전선은 공권력과 집회 군중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공간이다. 물론 공권력의 배후에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물리적 전선에서 집회 군중이 저항하는 직접적인 적은 공권력이 된다. 또 여기서는 공권력이 그어놓은 물리적 금지선이 전선의 역할을 한다. 금지는 법률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고 위법한 금지일 수도 있다. 공권력은 이러한 물리적 금지선(또는 전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집회 군중을 해산시키거나 저지선 돌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집회 군중은 금지선을 넘기 위해 또는 금지선을 넘어 자행되는 공권력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물리적 전선의 저항폭력은 경찰의 최루탄 살포나 백골단의 폭력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일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과 2015년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된 차벽을 넘거나 밧줄을 걸어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추상적 전선은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공간에서 추상적인 적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전선을 말한다. 여기서 집회 군중의 폭력은 국가권력을 포함해 언론 권력, 자본 권력 등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4월 혁명과 1979년 부마항쟁에서 경찰서를 타격하고 권력자의 가옥을 방화한 일, 1980년 5월 광주에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방송국을 방화한 일, 가까이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군중 사이에 남겨진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우익 언론사의 간판을 떼어낸 일 등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폭력의 주체와 양상도 개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대 대중시위에서 물리적 전선의 폭력이 집회의 '전위' 세력에 의해 조직적인 형태로 발생했다면 추상적 전선에서는 불특정 대중에 의해 비조직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 1987년 6월 항쟁이나 1991년 5월 투쟁에서 최루탄이나 페퍼포그로 무장한 공권력의 바로 앞에서 있었던 것은 대체로 학생이나 조직노동자였고 그들은 현장 지휘부가 있건 없건 간에 일정한 대오를 형성해 공권력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권력이 없는 추상적 전선에서는 물리적 타격의 대상이 무엇 이건 간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속에 불특정 대중에 의해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다수에 의해 일시에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대오를 갖추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물리적 전선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두 가지 폭력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물리적 전선에서는 경찰의 저지선이 광화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로,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다시 신교로터리로, 종국에는 청와

대 100m 앞까지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고 경찰의 불법 채증에 항의해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물리적 충돌의 수위가 높지 않았던 데에다 거대한 인파에 비하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의 아주 사소하고 적은 횡수뿐이었다. 다른 한편, 추상적 전선에서는 사소한 충돌도 없이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무전기를 든 사복경찰이 군중 속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태극기 부대의 난폭한 언행도 구경거리가 됐을지언정 집단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다. 또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활동가들이 삼성반도체 공장의 집단 산업재해 사실을 홍보했지만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에는 달걀 투척 하나조차 없었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민중연합당 당원들도 그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 마녀사냥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의 사육을 그냥 스쳐지나갔다.

### 3. 촛불집회의 비폭력 배경

지난 촛불집회에서 비폭력-준법 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통시적 측면에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저항의 제도화, 공시적 측면에서는 지배세력의 균열로 인한 전선의 변화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전선에서는 지배세력의 균열로 공권력이 자제 또는 후퇴했고, 추상적 전선에서는 물리적 전선의 비폭력의 영향과 함께 전선의 변화로 박근혜 1인을 제외한 적이 비가시화 됐기 때문이다.

## 1) 저항의 제도화

저항의 제도화는 저항운동이 국가 체제 내부로 포섭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관례적이고 온건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사회운동이나 사회운동 조직이 변화하는 것”(홍석화 2014, 154)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억압폭력의 압도성이 비가시화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항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또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정적 계기는 1991년 5월 투쟁이었다. 분신정국이라고도 불렸던 당시 투쟁은 13명의 자살자를 내면서 전투적 학생운동이 막을 내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이후 김대중·노무현의 민주계 정권이 잇달아 집권하면서는 노동조합 등 전통적 사회운동단체(이하 민중운동단체)들이 폭력적 반정부 투쟁을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계의 집권 실패와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후 반정부 구호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민중운동 진영의 전반적인 세력 약화와 시민들의 외면 속에 이전 같은 폭력적 대정부 투쟁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임미리 2017).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개인주의의 심화, 그리고 개인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대 속에 ‘집합행동의 개인화’ 혹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전통적 집단정체성이나 제도적 충성심으로부터 분리돼 파편화한 개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식적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대신 개인화된 이슈들에 선택적으로 참여해 행동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최재훈 2017, 76). 한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집단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로 가시화된 것은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촛불집회를 통해서였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는 이때부터 야간 집회의 우회 수단이자 새로운 집회 문화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 가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개별적 참가와 전통적 사회운동단체의 조직적 동원이 처음으로 만나게 됐으며 이후 한국의 대규모 대중시위는 대체로 두 집단이 결합한 가운데 촛불집회의 형태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저항의 제도화 현상은 민중운동단체의 ‘선거심판론’과 결합해 더욱 강화됐으며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국민운동본부(국본)가 전체 시위의 지도부 역할을 한 이후 노조 이외의 일반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중시위는 대체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에 이르는, 소위 전선 단체가 유사한 역할을 했다. 시기별로 현안의 이름을 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언급한 전선 단체의 소속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도부 역할은 전선 단체의 간부들이 맡아왔다. 변화가 생긴 것은 2008년 촛불집회부터다. 당시 촛불집회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주도하면서 “깃발 내려!”라는 구호로 민중운동단체들을 배척했다. 참가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관련 대책위가 지휘권을 넘겨받았지만, 예전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집회는 처음부터 민중운동단체와 일반 시민이 결합한 속에 이뤄지면서 전선 단체 지도부가 집회 공지서부터 진행과 행진, 마무리를 관장했다. 2008년 시작

된 ‘깃발 내려!’ 요구는 이때도 계속됐으며 집회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 퇴진!’ 같은 정치 구호의 자제를 참가자들에게 스스로 요구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 산하의 어느 노조에서는 노조원들에게 조끼 착용을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008년부터 폭력 대 비폭력 논쟁도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집회에서는 규탄보다는 추모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폭력시위는 물론 ‘박근혜 퇴진’ 구호조차 제지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민들의 행진도 신고한 장소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책’이라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5월 17일에는 청와대로 가려던 시위대 200여 명이 안국동 현대빌딩 사옥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고(경향신문 2014/05/20) 다음 해 4월 18일에는 연좌농성 중인 유족에 시위대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벽을 시위대가 들어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비폭력 기조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규탄 투쟁이 전개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의 ‘민중총궐기’<sup>6)</sup> 집회를 제외하고는 2016년 말 촛불집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중의 폭력시위 제지와 지도부 스스로의 자제가 맞물린 결과였다. 지도부의 자발적 자제는 선거와 관련이 있었다. 2008년과 2014년 모두 얼마 뒤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선거에서 집회 대중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도부의 전략은 ‘선거에서 심판하자!’라는 구호 속에 폭력시위는 물론 대통령 퇴진 같은 직접적인 정치 구호 자체를 금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2015년 말 3차례, 2016년 2월 27일 1차, 3월 26일 2차, 11월 12일 3차가 진행됐고 2017년에는 2월 24일~25일에 1차례 진행됐다.

2016년 집회 주관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었고 지도부라기보다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2016년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으로 시작된 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3월 10일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마지막인 23차 집회는 2017년 4월 29일로 5월 9일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열흘 전이었다. 23차 집회 당일에는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라는 슬로건으로 '촛불시 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및 만민공동회'가 개최됐다. 대통령선거의 야당 승리를 촛불집회의 결실로 사고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2) 지배세력의 균열과 전선의 변화

지난 촛불집회의 비폭력은 종편의 집회 보도 방향과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29명의 탈당에서 알 수 있듯 지배세력 일부가 이탈한 가운데 전개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불거져 나왔고 우익 언론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그 같은 이탈은 예측이 가능했다(서영표 2017,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 언론은 물론 기회주의적 보수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까지 대거 촛불집회에 결합한 것을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7)</sup> 지배세력의 이탈과 보수세력의 촛불집회 결합은 집회에 참가한 대규모 군중 때문이었다. 조

---

7) 조선일보의 경우 이전부터 박근혜와 불편한 관계이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사 고영태가 TV조선에 최순실 동영상 한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처음부터 박근혜 반대 시각을 직접적으로 노출했던 것은 아니다.

선일보사에 방화하거나 새누리당 당사에 투석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군중 자체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강제력이나 위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영결식이 있던 11월 5일 2차 집회에 2008년 최대 참가인원인 20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30만 명(광화문광장에는 20만 명)<sup>8)</sup>이 참가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1차 때는 야당 가운데 정의당만 참여했으나 2차에는 대선주자를 포함해 야당 의원 다수가 참여했고 여권에서도 “분노의 민심 느껴… 못한 정권”(TV조선 2016/11/12) 같은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1백만 명이 참가한 3차 때는 한겨레신문 같은 야권 언론뿐 아니라 종편에서도 촛불집회를 4·19나 6월 항쟁과 비교하며(한겨레 2016/11/06; TV조선 2016/11/12) 집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야당을 견인한 것도 국민이었다(최종숙 2018, 35). 3차 집회 직후인 11월 14일에는 대통령 박근혜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국민의 거센 반발에 즉각적인 하야 요구로 방향을 바꿨으며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김용태가 당 대표 이정현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시사했다. 또 4차부터는 야 3당이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당기를 들고 참가했다. 4차 집회 직전인 11월 17과 18일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지배세력의 균열을 그대로 반영했다. 박근혜 지지율이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를 반영하듯 19일 종편 보도에서는 “여, 국민 마음 겸허한 자세로 경청”, “야, 리더 많은데 리더십 없어”, “민주당, 5% 대통령 95% 국민에 맞서지 마라”, “민주당 ‘국민 민심은 대통령 퇴진’”, “야 참룡들, 각

8) 주최 측 추산(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항목), 이하 같음.

지역서 ‘촛불’ 참여”(TV조선 2016/11/19)처럼 야당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였고, 26일 5차 집회 때는 “‘혼돈의 정국’…박 대통령 선택은?”, “‘거국중립내각’ 총리는 누가 맡아야?”(TV조선 2016/11/26)처럼 박근혜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지난 촛불집회는 정치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1인과 상위 1% 권력 간에 생긴 균열을 바탕으로 5 대 95의 정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개됐다. 또 그 과정에서 5 대 95의 구도는 집회 광장의 전선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세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고 정당 일체감이 높을수록 집회 참여도가 높았다(이재철 2017, 61). 이것은 과거 집권 정당에 대한 불만을 선거를 통해 표로써만 행사하며 직접행동에는 소극적이었던 유권자들이 대거 광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의 평가가 유권자들이 촛불집회 참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이재철 2017, 61)는 촛불집회가 박근혜 퇴진을 포함한 ‘통치 체제의 안정’이라는 보수적 의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각 계각층의 다양한 분노와 요구가 묻힐 수밖에 없었던 더욱 직접적인 이유는 우익 언론의 가세로 집회의 프레임이 획일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집회 과정에서 우익 언론은 “박근혜-최순실-친박을 ‘비정상’으로 몰아가면서 촛불민심이 담고 있는 근본적 비판의 대상인 기존 질서를 ‘정상’으로 표상”(서영표 2017, 61)함으로써 촛불집회에 내재한 ‘저항’의 의미를 소거하려고 했다. 이와 동시에 비폭력을 시민, 폭력을 비시민으로 가르는 한편 “이석기·한상균 석방” 구호나 “재벌 해체”와 같은 목소리를 ‘좌경’이나



‘촛불정신 왜곡’ 등으로 비난하면서 촛불 군중으로부터 분리해내고자 했다(한국경제 2016/12/29; 조선일보 2016/12/16). 과거 대중시위의 전선이 억압 권력 대 피억압 계층 또는 지배세력 대 저항세력이었다면 2016년에 와서는 5%의 비정상 대 95%의 정상으로 바뀌었고 95%의 정상 중에서도 폭력 행사자는 비시민으로 분류하면서 배제한 것이다.

12월 31일 11차 집회 광장에 올려 퍼진 애국가는, 연인원 1천만 명이 맞서 싸운 적이 국가나 자본 같은 권력이 아니라 비정상에 속하는 일부 정치인이었고 그에 맞선 국민도 저항세력이 아니라 정상에 속하는 온건 시민이었다는 것을 방증했다. 같은 날 촛불집회의 맞은편에서 열린 우익 집회에서도 애국가를 불렀다. 5%와 95% 모두 애국가를 ‘정상’의 기표로 사용한 것이다. 박근혜에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만이 달랐지 양쪽이 모두 통치 체제의 안정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 3) 물리적 전선: 공권력의 자제 및 후퇴

저항의 제도화와 지배세력의 균열로 인한 전선의 변화가 비폭력의 전 반적 배경이라면 구체적으로 물리적 전선에서 저항세력의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연행자도 없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시위대보다는 공 권력의 자제와 자발적 후퇴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대중시위에 서는 평화시위가 전개됐더라도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강제진압에 나서면 서 정당방위 차원의 ‘반(反)폭력’이 시도된 일이 많았으며 시위대가 폭력 이나 불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연행되는 일도 잦았다. 2014년 세월

호 집회 때만 하더라도 시위대는 비폭력을 기조로 했지만, 경찰 측에서 오히려 폭력이나 불법을 조장한 뒤 연행해가는 일이 많았다. 침묵 마스크를 쓰고 보도를 행진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보도 양쪽을 차단한 뒤 도로로 내밀어 도로에 발을 디디는 순간 연행한다거나 경찰의 불법 촬영에 항의해 다툼이 벌어지면 관여된 사람들을 연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을 유도하기는커녕 사소한 폭력이나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눈감는 분위기였다.

경찰의 폭력 자제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다. 이유는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 때문이었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 직전인 10월 22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사건을 다루면서 강제진압에 대한 분노가 확산됐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경찰의 위축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 1차 집회 때는 이후 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만 명이 참가해 시위대가 집회 신고가 된 종각 일대를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진출했지만,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만 막은 채 연행보다는 해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30만 명이 참가한 2차 집회 이후 경찰의 태도는 2008년과 명확히 대비됐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참가자 수가 20만 명에 달한 6월 6일 직후인 6월 8일 물대포와 쇠파이프가 경찰과 시위대 양쪽에서 각각 등장해 경찰 차량 19대가 파손되고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모두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2차 집회부터 유모차를 끌거나 가족 단위 참가자가 등장하는 등 ‘투쟁’보다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더욱 크게 자제한 것은 경찰과 사법 당국이었다. 집회 군중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경찰에서 먼저 지난 집회의 저지선을 조금씩 넘어서는 집회 신고를 수용하는가 하면 사법 당국에서는 과거 집회 신청을 불허한 경찰의 결정에 위법 판결을 냄으로써 경찰의 저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전의 저지선을 넘어서는 집회 허가 결정은 대부분 집회 직전 이뤄졌는데 심지어 청와대 앞 400m의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한 11월 19일 4차 집회 때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회 몇 시간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 2017, 434).<sup>9)</sup>

11월 12일 3차 집회 직전인 10일 경찰 당국은 처음으로 청와대 1km 앞인 내자교차로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교차로에는 차벽을 설치해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차단했지만, 참가자 규모가 1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래는 당일 오후 8시경 TV조선에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보도한 자막 기사로 당시 경찰 당국과 TV조선 측의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TV조선 2016/11/12).

- “내자로터리는 청와대와 1km 거리”
- “내자로터리 뚫리면 유혈 충돌 생길 수도”
- “시위대, 방송차 앞세워 경찰 돌파 시도 중”
- “경찰, 청와대 쪽 ‘최후 저지선’ 초긴장”
- “경찰 ‘몸싸움 중지해 달라. 부상자 발생해선 안 돼”
- “대치 중 내자로터리… 왼쪽선 밀고, 오른쪽선 ‘비폭력’ 구호”
- “몸싸움 벌어지면 인파 밀집 부상 속출 우려”

9) 2016아12386-12393(병합) 2017/11/19.

결과적으로 이날 유혈 충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왼쪽선 밀고, 오른쪽선 ‘비폭력’ 구호”라는 보도와 달리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는 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교차로까지 진출한 시위대 대개는 민중연합당, 노동당, 데모당, 노동자연대 등 강성투쟁에 익숙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저지선 돌파를 시도했다면 큰 충돌이 불가피했다. 마치 시위대가 폭력과 비폭력 둘로 갈라진 것 같은 보도와는 달리 일부 참가자들이 차벽 위에 올라가고 저지선을 몸으로 미는 행위가 있긴 했으나 선도 차량을 앞세워 실제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가 임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대규모 군중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집회 때 종편방송에서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돌파 시도를 과장해 보도하기는 했지만, 참가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박근혜 탄핵과 청와대로의 행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 갔다. 충돌이 불가피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돌파라는 폭력과 불법을 예방한 것은 사법 당국의 공이었다. 3차 이후에도 집회 공간은 점차 확장됐으며 11월 19일 4차 집회 때는 청와대 앞 400m 신교로터리, 11월 26일 5차 집회는 청와대 앞 200m, 12월 3일 6차 집회는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가됐다.

전국에서 무려 232만 명이 참가한 12월 3일 6차 집회 때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는 역사가 새로 쓰였다. 당시 종편에서는 “청와대 앞 시민들, 애국가 4절까지 완창”(TV조선 2016/12/03), “현재 전국 집회 관련 경찰 연행자는 ‘0’”(TV조선 2016/12/03) 같은 보도를 통해

집회의 애국성과 비폭력성을 칭찬하는 한편 이석기 석방 구호를 외치는 구 통합진보당 세력에 대해서는 집회의 ‘순수성’을 변질시킨다고 비판했다. 당일 TV조선의 뉴스 보도에서는 좌측 상단에 <뉴스 특보> 형식으로 “촛불집회에 ‘통진당 깃발’ 등장”이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참가자 수 30만 명이 넘어서면서 경찰과 사법 당국, 여야 정치권이 집회 군중에게 밀려 조금씩 후퇴하다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는 박근혜 퇴진을 기정사실화했고 200만 명에 이르러서는 집회 군중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폭력 행사자나 일부 급진 세력만을 ‘순수’ 집회 군중에서 구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에서 찬사를 퍼부은 촛불집회의 비폭력은 다수 참가자의 비폭력 요구, 그리고 대규모 군중 수에 밀린 억압폭력의 자제와 지배세력의 자발적 후퇴가 상호작용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권력이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한 아렌트의 말(아렌트 2011)에 따르면 지난 촛불집회는 대규모 군중이 갖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권력을 만들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규모 군중이 만들어낸 권력은 박근혜 1인을 퇴진시키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권력이 되지는 못했다. 이유는 비폭력이 공권력의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리적 전선은 저항세력이 국가권력을 대리한 공권력과 대결하는 장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후퇴는 국가권력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사임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후퇴했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완전한 장악에 실

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배경은 지배세력의 균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리하면, 대규모의 군중 자체가 권력이 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권력을 후퇴시킬 수 있었지만, 저항세력 자체만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균열에 힘입은 것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1인의 퇴진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의 창출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 4) 추상적 전선: 위협의 소멸과 적의 비가시화

추상적 전선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배경은 물리적 전선의 비폭력에 따른 위협의 소멸, 그리고 전선의 변화로 인한 적의 비가시화,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물리적 전선에서 저항세력의 폭력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라면 추상적 전선에서는 물리적 전선의 영향을 받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형태로 폭력이 발생한다. 물리적 전선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추상적 전선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밀집한 군중 사이의 열광적 분위기에서 지배세력의 상징에 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물리적 전선에서 억압폭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추상적 전선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사라지게 됐다. 집회 군중의 절대다수가 비폭력을 희망했다더라도 물리적 전선의 억압폭력과 그에 따른 위협이 있었다면 추상적 전선에서도 군중의 비폭력 요구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2008년에는 참가 군중 다수가 비폭력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공권력이 강제진압을 시도했고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폭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전선에서는 민중운동단체와 이에 가세한 예비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힘으로 맞섰다. 찬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명박산성을 훼손하고 뛰어넘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가운데 추상적 전선에서는 당시 서울역 프락치로 불렸던 노숙자들이 군중 한가운데 남겨진 경찰 차량을 파손했고 좌파 단체 구성원들이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의 간판을 떼어내는 일도 벌어졌다. 2016년에는 3차 집회 때까지 경찰 차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거센 항의에 직면하면서 4차 때부터는 어떠한 물리적 돌파도 시도되지 않았고 이것은 추상적 전선의 광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전선의 폭력에 따른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저항폭력이 사라지면서 추상적 전선의 폭력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리적 전선의 비폭력이 추상적 전선의 위협과 그에 따른 폭력적 열기를 소거함으로써 폭력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면 정치 구도의 변화는 추상적 전선의 적 자체를 비가시화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했다. 지배세력의 이탈로 5 대 95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저항의 대상도 박근혜 1인으로 한정되고 말았다. 이것은 추상적 전선에서 분노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귀착됐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우익 언론은 집회 군중을 '정상'으로 표상하면서 '비정상'인 '박근혜-최순실-친박'을 제외한 여타의 분노를 소거하고자 했다. 모든 적폐의 주범은 박근혜 1인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제외하고는 집권 세력을 포함해 여타의 억압 권력에 대한 분노가 촛불집회와는 무관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치부했다. 광장의 목소리를 고학력-고소득층을 위주로 한 보수적 참가자들의 비정

치적이고 온건한 요구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투쟁 언어”(조선일보 2016/12/05), “정치 구호”(서울경제 2017/01/20) 같은 표현을 동원해 불순한 것으로 포장했다. 집회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용에는 삼성의 국민연금 매수가 포함돼 있었으며, 1차, 2차 집회의 개최 배경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는 공권력으로 표상된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가, 2014년 4월 시작돼 2년여간 지속되면서 2016년 집회의 동력으로 작용한 세월호 사건에는 통치 체제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내재해 있었지만 가시화되지 못했다. 우익 언론의 프레임에 시민들이 포획되면서 집회의 최대이자 단일 의제가 박근혜 퇴진으로 가시화된 ‘통치 체제의 안정’으로 귀결됐고 나머지 적들에 대한 분노가 접화될 가능성이 차단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재벌 해체 요구는 좌경으로, 혁명 정신 부활, 사드 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지 구호는 급진적 정치 슬로건으로 매도되면서 균중의 분노는 오로지 박근혜 1인에만 맞춰져야 했다. 더욱이 우익 언론이 촛불에 편승하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마저도 분출될 수 없었다. 2008년 분노한 균중들이 우익 언론사의 간판을 떼어냈던 일은 2016년에는 결코 재연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수 시민에게 이미 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집회 전체 공간에서 폭력이 사라지면서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별 역시 모호해지게 됐다. 연행자 수가 ‘0’이 됐던 4차 집회 이후 ‘박근혜 드라마 시청방해 나팔 부대’의 나팔 합주를 비롯해 크고 작은 퍼포먼스가 경찰 저지선 바로 앞에서 펼쳐졌다. 3차 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이전 어떤 대중시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지난



촛불집회가 문화집회로 찬사를 받기는 했지만, 집회 광장의 문화예술 행동은 천정환의 지적대로 “직접행동의 주요한 내용이자 형식 그 자체”(천정환 2017, 439)이지 비폭력의 부산물·결과물이 아니다. 비폭력 집회가 아니라도 문화예술 행동은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촛불집회가 갖는 특성은 공권력과 대치 상황에서 행해졌다는 데 있다. 대중시위의 모든 저항에는 깃발에서건 노래에서건 문화적 상징이 포함된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뛰어나간 행위,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장갑차를 가로막은 행위, 모두 공권력과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문화적 상징행위다. 차이는 위협의 유무와 행위의 의미에 있다. 1987년 서울과 1989년 천안문의 행위가 공권력의 물리적 폭력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속에 선도적인 저항의 의미로 행해진 것이라면 지난 촛불의 나팔 부대는 위협이 부재한 공간에서 행해진 대중의 퍼포먼스였다. 후방이 아닌 시위 전방에서 문화적 퍼포먼스가 대중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은 전방이 전방으로서의 성격을 잃었다는 것이고 후방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3차 집회 때까지는 경찰 저지선과 인접한 공간에 원외 진보 정당이나 좌파 단체의 깃발이 주를 이뤘으나 4차 집회부터는 2016년 촛불집회의 특성을 대변하는 이색적인 이름의 깃발들이 저지선 바로 앞에서 물결을 이뤘다. 급기야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이 허용된 12월 10일의 7차 집회 때는 ‘사범시험 존치 모임’을 비롯해 ‘박근혜 탄핵 육사 동기회’ 같은 깃발도 최전방에 출현했다. 물리적인 억압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이 함께 사라지면서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공간적 구분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이다.

#### 4. 비폭력-준법의 영향: 또 다른 균열·배제와 새로운 가능성

이상에 따르면 지난 촛불집회의 비폭력은 지배세력의 균열과 그에 따른 전선의 변화가 대규모 군중 수와 맞물린 가운데 공권력의 자발적 후퇴와 집회 군중의 폭력 자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가능했고, 집회 공간 전체에 폭력이 사라지면서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분도 사라지게 됐다. 또 평화적인 '시민'과 폭력적인 '비시민'의 프레임 속에 비폭력과 함께 준법, 질서 유지 등 시민적 덕목도 요구됐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특성에 깃발로 표현된 집회 참가자들의 성격을 더해 지난 촛불집회가 과거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지난 집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깃발은 '쾌시민'의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래는 새로 등장한 깃발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 것이다. 첫째, 둘째, 여섯째의 구성원들은 과거 대정부 투쟁을 목표로 한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는 그 반대다. 첫째, 셋째, 넷째는 구성원들의 계급·계층적 정체성이나 집단 이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서 유사하며 둘째, 다섯째, 여섯째는 깃발 명에 집단의 이해 또는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 '혼참리'<sup>10)</sup>도 많았지만 아래 여섯 그룹과 별개의 정체성을 갖지는 않는다. 집단 없이 혼자 참가했더라도 깃발을 든 경우가 있으며<sup>11)</sup> 깃발 없이 혼자 참가한 경우에도 기회가 됐더라면 깃발을 들었을

---

10) 깃발이나 소속 단체 없이 혼자 참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1) 광화문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한다는 중년 남성은 대형 '박근혜 퇴진' 깃발을 홀로 들고 나왔다.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개인 또는 모임의 개성을 표현한 깃발로 장수풍뎡이연구회, 신촌 잉어회 조개 줍기 모임, 혼자 나온 사람들, 전국대머리연합회, 범우주 일꾼노동조합(스타), 판지일보 애묘당, 판지일보 음란변태당, 전국 집순이 연합, 강남서명 바꾸세, 새누리표발 강남사람들, 일못-일 못하는 사람들의 유니온<sup>12)</sup> 등이 있다. 2008년 처음으로 등장했던 안티MB카페, 소울드레서 등 깃발은 이번 집회가 처음은 아니지만, 정치적 지향을 표방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데서 같은 그룹에 포함했다.

둘째,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깃발로 키코 피해자 모임,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법고시 존치 모임 등이 있다.

셋째, 과거 또는 현재의 연고를 표현하는 깃발로 ○○대 ○○과, 역사문제연구소, 현대철학연구회 등이 있다.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과거 집회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2002년 이후 촛불집회에 해당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단, 현재의 대학 학생회와 각종 동아리, 민주동문회 등의 깃발은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치화된 경우로 지역별 4·16연대 지부와 관련 모임이 있다.

다섯째, 사회 소수자 집단의 깃발로 성소수자 연합, 용산 참사 피해자 모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형제복지원 모임), 장애인연대 등이 있다.

12)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페이스북 그룹으로 노동조합은 아니다.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인 여정훈이 자신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다가 낚두리 삼아 만들었다고 한다.

장애인연대는 과거 촛불집회에도 꾸준히 참가했지만 민중운동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여성주의그룹의 깃발로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박하여행), 페미당당, 강남역 10번 출구, 불꽃페미액션 등이 있다. 다섯째의 사회 소수자 집단과 유사하지만, 민중운동단체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만큼 세력 또는 목소리가 컸다는 데서 별도로 구분했다.

## 1) 새로운 균열과 ‘우리’ 안의 적과 동지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방과 후방, 전위와 대중, 그리고 이에 따른 위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2008년 5월 29일. 청계광장과 광화문. 차벽을 앞에 두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놀거나 이야기를 하는 등 거리를 점거한 시민들을 경찰이 차츰 조여오기 시작한다. 그러자, 예비군복을 입은 남성 40여 명이 우르르 모여 스크럼을 짠다. 경찰들의 폭력 진압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여자분들 뒤로 빠져주세요. 위험합니다. 다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빠져주세요.”라고 외치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빼기 시작한다. 함께 스크럼을 짜겠다는 여성에게 “할 수 있겠어요?”라고 의아하게 쳐다보며 예비군 몇 명 더 보내달라고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허철·한우리 2010, 42).

위 인용문은 2008년 촛불집회의 한 상황으로 참가 군중 내부의 서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 진압은 그에 맞서는 물리적 방어력을 요구했고 그것은 다시 집회 군중을 물리력을 중심으로 서열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이 같은 서열화가 불필요했다. 억압폭력이 가져올 위험도 없었고 적이 박근혜 1인으로 한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공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과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만 남은 평화로운 공간은 그 자체로 새로운 균열의 가능성을 내포했다. 적과 위협의 존재는 위계적 서열 구조 속에 우리의 통합을 요구하지만, 그것의 소멸 또는 부재는 그간 하나의 이름 아래 봉합됐던 균열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균열은 바로 ‘여혐 논란’이다.

시작은 제4차 촛불집회의 사전집회 때 나온 “미스 박, 미스 박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머리끄덩이를 잡고 데리고 내려오고 싶네요” 같은 발언이었다. ‘미스 박’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항의가 잇따르자 주최 측이 사과 성명을 내야 했으며 5차 집회 때 예정됐던 디제이 디오씨 (DJ DOC)의 공연은 ‘수취인 불명’에 포함된 ‘미스박’, ‘하도 짤러대서 얼굴이 빵빵’ 등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항의로 가사를 고쳐 7차 집회 때야 불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4차 집회일인 11월 19일에는 여성들만의 집회 공간인 ‘페미존’이 설치됐고 여성과 성소수자 단체 약 2백여 명은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으로 단독 집회를 가졌다. 2017년 10월 개봉한 영화 <시국페미>의 소재가 되기도 한 페미존은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언, 불쾌한 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탄

생했고 박하여행, 페미당당, 강남역 10번 출구, 불꽃페미액션,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 범야옹연대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의 여섯째 그룹을 중심으로 첫째, 다섯째 그룹에서 일부 결합했다. 페미존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자들은 행동수칙을 정하고 자경단을 구성해 혐오 발언과 플래카드를 신고하고 여성 참가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에도 공동 대응했다(한국일보 2016/11/24) 그러나 주최 측이 이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과는 달리 SNS 상에는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프락치라는 공격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에 페미존을 이끈 단체 중 하나인 페미당당은 5차 집회가 있던 11월 26일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내놨고 다른 한편에서는 ‘광장을 보이콧하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페미존의 페미니스트들이 “민주주의는 여성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구호로 집회 참여를 고수하며 여성 혐오에 대응하려 했다면, 메갈세대를 중심으로 나온 집회 보이콧 주장에는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는 절대로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뒤따랐다(우지안 2018, 79~80).

‘광장 보이콧’, 또는 ‘집회 보이콧’ 주장은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 나타난 ‘편<sup>13)</sup> 배제’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혜화동 시위 주최 측이 선언한 ‘편 배제’의 배경을 우지안은 “① 해당 부문 운동이 전체 대의를 위한 부문 운동으로 부차화될 것에 대한, ② 다른 의제와 섞여 지금의 동력과 대중적 공감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③ 개별 운동에서 자신들

---

13) 운동권의 약칭.

이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우지안 2018, 84)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장 또는 집회 보이콧 주장이 광장의 단일한 정치 의제 속에 여성 인권이 도외시 되는 데 대한 항의에서 나왔다면, 해화동 시위의 ‘편 배제’는 운동권이 개입할 경우 여성 의제가 대의명분을 내세운 다른 정치 의제로 포섭돼 버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여협 논란에서 광장의 여성주의자들이 두 가지 전선, 즉 박근혜 탄핵을 위한 전선과 가부장제 및 성차별에 맞서는 전선에 서야 했다면 실제 집회를 보이콧한 여성주의자와 해화역 시위 참가자들은 단일한 정치 전선 대신 여성주의 전선을 선택한 셈이 된다.

집회 전체 측면에서 여협 논란은 박근혜 탄핵으로 단일화한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전선, 새로운 적과 동지의 관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전 집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폭력 대 비폭력 논쟁을 포함해 군중 내부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선 자체에 영향을 미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여협논란을 통해 가시화된 적대는 기존의 전선에 균열을 내는 것은 물론 이탈한 일부가 새로운 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단일한 정치 의제가 대의명분으로 포장돼 부문별 의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리’라는 이름 속에 더 이상 어떤 균열도 은폐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됐다. 과거에는 내부의 균열을 은폐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균열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2) 역전된 권력과 은폐된 균열

2008년이 깃발 대 촛불의 대결이었다면 2016년은 깃발 대 깃발의 대결이었다. 2008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참가자들이 조직적 참가자들을 향해 “깃발 내려!”라고 외친 것이 과거 대중시위를 지도·지휘한 민중운동단체를 향해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다면 2016년 등장한 각양각색의 깃발은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위의 그룹 중 첫째, 둘째, 여섯째에서 강하게 드러난 경향이다. 촛불집회 최초의 이색 깃발로 알려진 ‘장수풍뎡이 연구회’가 등장한 것은 106만 명이 모인 11월 12일 3차 집회 때였고 19일 4차 집회 때부터는 경쟁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다. 각각의 깃발이 주체의 선언이었다면 거대한 깃발의 물결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압도적 다수가 깃발로써 과거 민중운동단체와는 다른 정체성을 표현한 순간 그것은 권력이 됐다. 이전까지 비폭력, 준법, 질서를 외치는 목소리가 파편화된 다수의 요구였다면 깃발의 물결은 그것을 권력의 명령으로 만들었다. 3차 집회 때까지 일부 존재했던 폭력적 저항이 4차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도 새로운 깃발이 대거 등장하는 것과 때를 같이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깃발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해야 했던 것은 과거 폭력과 불법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평화로운 시민들의 반대편에 있던 민중운동단체의 깃발이었다. 과거 대중시위에서 저항폭력의 주체였던 이들은 역전된 권력관계 속에 목소리를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촛불집회는 민중운동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퇴진행동이 주최자였



지만 새로 출현한 깃발의 요구를 이행하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권력의 요구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라도 신고 시간에 맞춰 광화문 광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와 달리 세월호 집회 때만 해도 행진을 마치고 서울역 또는 청계광장으로 복귀하라는 주최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일부는 좌파 단체들과 함께 청와대행에 참여했다. 또 단상의 구호에도 전에 없던 제한이 가해졌다. 새로운 권력이 상정한 적은 박근혜 1인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적을 불러내서는 아니 됐다. 광화문의 단상에서 ‘비정규직 철폐’, ‘재벌 해체’와 같은 ‘소위’ 투쟁적 구호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 집회 말미나 군중들이 해산할 즈음에 파편적으로 등장한 것이 전부였다. 2014년 세월호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의 자제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에서 산하 단체에 노조 조끼 착용을 금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수층이 대거 참가한 집회에서 주최 측의 이 같은 처신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차 집회가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과 함께 치러졌고 파업 중이던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들이 초기 집회의 동력이 됐던 만큼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투쟁은 쉽사리 외면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분위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운동단체들은 촛불집회와는 별개로 개최된 민중총궐기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었다.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 때까지 같은 차수의 민중총궐기 집회가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와 함께 개최됐고 11월 12일 3차 민중총궐기 직후 결성된 ‘전봉준 투쟁단’은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투쟁을 벌였다.

투쟁단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한 11월 26일 5차 집회 때 비록 트랙터는 없었지만<sup>14)</sup> 행렬의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다. 그렇지만 광장의 축제 분위기는 강성 구호와 어울리지 않았고 민중총궐기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이 촛불집회에 결합했다라도 새로운 깃발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조직노동자는 규율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돌발적 개인행동도 나오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들의 규율은 상급단체와 전선 단체가 정하는 것이었다. 축제 같은 광장의 분위기는 이처럼 과거 권력의 침묵 또는 배제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촛불집회는 “깃발”로 상징되는 연단 중심의 조직적 운동권 문화와 ‘촛불’로 상징되는 자율적이고 비조직적인 참여 문화가 빚었던 오랜 갈등의 현 단계적 결말<sup>15)</sup>이자 “기존 시위 문화에 대한 전복적 저항”이라는 해석(이관후 2017, 72)은 타당하다. 문제는 그러한 전복의 결과 시위 문화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침묵 당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전복을 고양된 시민의식의 승리로 보는 해석은 광장에 존재했던, 축제를 즐기는 새로운 깃발과 목소리를 잃어버린 과거의 깃발 사이의 균열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침묵 당한 목소리는 축제 같은 것과는 비길 수 없는 생존권적 요구였고, 균열의 은폐는 그러한 목소리가 광장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침묵의 책임이 새로운 깃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민중운동단체는 민주정

---

14) 투쟁단은 서울 진입 직전 경찰의 저지로 트랙터에서 내려야 했다.

부 수립과 정권 교체를 지상 과제로 설정해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을 부차화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민중운동단체의 위상은 각각의 생존권 투쟁을 목표로 한 부문 운동 단체가 아니라 이분법적 정치 투쟁에 매몰된 전선 운동 단체의 일부라는 것이고 여성주의자 집단의 민중운동단체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 3) 비시민의 배제와 강화된 경계

비폭력과 준법 시위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더 많은 시민을 광장으로 동원하는 데 기여했다면, 거꾸로 폭력이 없는 축제의 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폭력으로써만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바로 도시하층민들이다. 이들은 또한 비폭력과 준법, 질서로써 축제의 장에 참가할 수 없는 ‘비시민’들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새로운 저항문화를 꿈꾸며 기존 시위문화를 전복하고자 했다면 비시민들은 세상의 전복을 꿈꾼다. 시민들이 적폐로 얼룩진 박근혜 1인을 퇴진시켜 통치 체제의 안정을 희망했다면 비시민들은 세상 전체를 적으로 삼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기를 꿈꾼다. 왜냐하면 비시민은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말할 목소리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통치 체제가 안정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전히 비시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시위에서 물리적 전선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의 주체가 학생운동 세력이나 조직 노동자였다면, 도시하층민은 추상적 전선에서 발

생하는 비계획적이고 파편화된 폭력의 주된 담지자였다. 도시하층민<sup>15)</sup>은 “이질적이고 비균질적인 사회집단”(김원 2006, 423)으로서 개념상으로도 조직적 폭력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차이는 민중운동단체의 저항에 내재된 분노가 자본가나 우익 언론, 국가권력 같은 지배세력을 향한 것이라면 도시하층민의 폭력적 저항은 세상 전체로 향해 있다는 점이다. 타자성과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하층민은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 또한 지배세력뿐이 아니라 세상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도시하층민과 그 폭력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역대 대중시위에서 도시하층민을 ‘폭도’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 저항세력 내에서조차도 이들을 ‘프락치’로 간주하거나 직접 붙잡아 공권력에 인계하는 일도 있었다.<sup>16)</sup> 이것은 도시하층민의 경우 지배세력에 저항하는 ‘우리’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위였다.

도시하층민은 2008년 서울역 프락치로 불리며 퇴장을 요구당했다가 2014년 세월호 집회부터는 자취를 감췄다. 주변성과 타자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하층민은 조르주 아감벤이 개념화한 ‘호모사케르’에 해당한다. 호모사케르는 국가 또는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로 동일성(identity)을 지향하는 국민국가에서 예외 상태의 존재다.<sup>17)</sup> 한때 존재했던 ‘부랑아’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산 선감원이나 부산 형제복지원, 서산

---

15)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도시빈민’과는 구분된다.

16) 1980년 5월 15일 '서울의 봄' 시위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해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한 청년을 학생들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동아일보, 1980.05.16.).

17)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개념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말한 계엄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로서의 ‘예외 상태’를 확장한 것이다.

개척단에 끌려가 법치국가의 예외 상태에 놓였던 비시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가야트리 스피박이 서발턴의 특징으로 말한 ‘스스로를 말할 수 없는 자’(스피박 2013)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신질환자의 그것, 부랑자의 헛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생존자 김영옥의 구술이다.

“1982년 말 부산에 있는 브리태니커 회사에 다니다 퇴근길에 난데없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찾으러 와 15일 만에 퇴소한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가 미쳤기 때문에 바로 저런 데 갔다 온 거다. 왜 찾아왔느냐, 거기 가만히 놔두지.”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삼 년 동안 거기 생활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대책위(준) 2012, 60,70; 김영옥 구술)

김영옥은 부랑자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단 15일간 예외 상태에 있었던 것만으로 미친 사람이 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sup>18)</sup> 하물며 실제 부랑 생활을 했거나 극심한 빈곤으로 일반적 의식주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언어가 사회에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대중시위에서 도시하층민의 폭력은 예외 상태의 존재가 세상에 전달 가능한 유일한 언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해도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 도시

18) 김영옥은 이후 형제복지원 경험을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청사, 1988)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하층민에게 폭력은 유일하게 세상에 전달돼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언어인 셈이다. 따라서 깃발로써 주체 선언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가시화할 언어도 잃은 도시하층민은 폭력이 차단된 축제의 장에 설 수도 없고 설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실제 2016년 당시 서울역 노숙인들의 경우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그들이 ‘서울역 프락치’로 불리며 시청 광장의 경찰 차량을 파손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시위대가 갔던 11월 30일 자정께 연구자가 면담한 서울역 노숙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왜 거기에 가냐?”고 답했다. 그들과는 무관한 세상의 일이라는 취지였다.<sup>19)</sup>

서울역 노숙인을 포함해 도시하층민들이 대규모 대중시위에서 사라진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부터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유일하게 폭력<sup>20)</sup> 시위가 전개됐던 2015년 4월 18일<sup>21)</sup>조차, 연좌농성 중인 유가족의 고립을 막기 위해 밧줄과 쇠사슬로 차벽을 들어내던 현장과 주변에는 데모당, 노동당 등 좌파 단체 회원들을 포함해 마스

19) 당일 면담은 연구자에게 한 노숙인이 담배를 빌리면서 우연으로 이뤄졌다. 소주 한 병을 사다 반씩 나눠 마시며 10여 분간 얘기했지만 녹음은 하지 못했다. 노숙 기간과 다른 노숙인들의 집회 참여 여부를 물었으며 2년이 넘었고 다른 노숙인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답변을 들었다.

20) 불법은 포함하지 않음. 신고하지 않은 불법시위는 주최 측의 의지와는 별도로 간혹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2014년 5월 17일 좌파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청와대행을 주장하며 안국동 현대그룹 본사 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당시 집회의 유일한 부상자로 서울대병원에 후송됐다.

21) 세월호 집회에도 2008년 이상의 비폭력 요구가 있었고 6월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주최 측이 폭력은 물론 강경 구호까지 제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주기 집회가 있던 2015년 4월 18일은 경찰이 유가족을 포위해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유가족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폭력 대응이 불가피했다.

크와 우비 등 시위 물품으로 무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22)</sup> 조직적 동원의 주체였던 민중운동단체가 새로운 깃발의 물결을 통해 비로소 광장의 주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 낱알의 파편으로만 존재하는 도시하층민의 경우 광장의 폭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설 자리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폭력은커녕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는 사소한 범칙행위조차도 제지당하고<sup>23)</sup>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물론 경찰 차량에 붙인 스티커도 다시 떼어내는 ‘고양된’ 시민의식 속에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남루한 차림의 도시하층민들이 발 디딜 공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부재를 알아차린 사람은 드물었다. 과거 대중시위에서 그들을 폭력의 주범으로 몰아 비시민으로 규정한 보수 언론도, 그들의 폭력 덕분에 안전을 피한 사회운동세력<sup>24)</sup>도, 그들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대학생들도 그들의 존재가 불편했던 기억은 희미하게 갖고 있을지언정 그들의 부재를 알아차릴 만큼의 관심은 없었다. 그들은 사소하기 그지없는 ‘밥풀때기’<sup>25)</sup>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

22) 시위 물품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참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말한다.  
 23) 성남시 분당구 축제에서 환풍망이 주저앉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위험을 경계했을 수도 있지만, 경고보다는 제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24) 김소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는 1991년 5월 투쟁 당시 성균관대 학생 김귀정의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을 경찰로부터 지킨 도시하층민들을 사회운동세력이 배척하는 얘기가 나온다.  
 25) 1988년 SBS 코미디 프로그램 ‘도시의 천사들’에서 김정식이 밥풀때기 역을 맡으면서 사회 소외계층을 일컫는 표현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다. 김소진의 소설에 사용되면서 대중시위의 도시하층민 참가자를 일컫는 말로 변용됐다. 1991년 5월 투쟁에서는 유사한

2016년 광장에는 세상 안의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무언의 경계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지난 촛불집회의 축제 분위기가 도시하층민들을 전반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광장의 한 권을 차지한 이들도 있었다. 위의 다섯째 그룹의 ‘형제복지원 모임’ 깃발이 그 증거다. 성소수자 모임의 무지개 깃발이 광장에 나부끼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형제복지원 생존자 같은 도시하층민의 깃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 즉 ‘커밍아웃’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것처럼 도시하층민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깃발을 드는 순간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지난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은 부분적으로 지난 촛불집회의 상징이었던 첫째의 깃발과 같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소통,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운동단체의 세력 약화 속에 과거 이분법적 전선의 주의·주장과는 다른 이해와 주장을 가진 주체들이 대중시위에 참여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주의자 깃발과 사회 소수자 깃발은 유사하다. 차이는 형제복지원의 경우 외부 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의 조력이 더해졌다는 데 있다. 물론 광장의 깃발은 이들이 이미 파편화된 도시하층민이 아니라 조직된 사회운동세력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여전히 수많은 도시하층민,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으로 더욱 늘어가는 비시민들은 더욱 강화된 시민

---

표현으로 ‘민주불량배’, ‘파고다 시위대’ 같은 말이 사용됐고, 2008년에 등장한 서울역 프락치도 비슷한 표현에 해당한다.



과 비시민의 경계 속에 광장에 발을 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5. 결 론

지난 촛불집회는 비폭력뿐 아니라 준법과 질서 유지가 시민적 덕목으로 요구된 장이었고 그것은 비폭력이 성공적 저항을 위한 전술보다는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촛불의 비폭력은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분을 없애면서 광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지만 광장의 요구를 준법시민의 온건한 목소리에 한정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의 생존을 건 투쟁의 목소리는 침묵 당해야 했고 광장은 시민들만의 공간이 되면서 비시민들은 배제돼야 했다. 적이 박근혜 1인에 한정되면서 박근혜의 퇴진과 통치체제의 안정, 뒤이은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적 요구와 통치 체제를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력은 제한당해야 했고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비시민이 광장에 발을 디디는 것을 어렵게 했다. 광장은 예전의 그것이 아니게 됐다. 전선 단체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한 것은 물론 여협 논란으로 새로운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단일한 전선, 하나 된 우리는 광장에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모든 이해를 수렴하는 하나의 전선, 차이가 봉합된 우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과거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

립을 위한 이분법적 전선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부문 운동을 동원했지만, 각각의 부문 운동은 처음부터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후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 교체가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것에서 증명되듯 이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만의 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나타났다. 광장에 등장한 여성주의 전선은 단일한 대오에 균열을 내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전선의 접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줬다. 또한, 축제의 장이었던 광장은 비시민을 배제함으로써 시민과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했지만, 형제복지원 깃발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도 발견됐다.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이 도시하층민의 조직화에 노력하는 단체라면 형제복지원 모임은 스스로를 조직화했다. 2012년 생존자 한중선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기로 결성된 형제복지원 모임<sup>26)</sup>은 선감원 생존자를 비롯해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이들과 교류하며 도시하층민들이 스스로를 가시화할 가능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한 광장은 기존의 파편화된 도시하층민을 배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전선의 공존을 가능케 하면서 이들의 깃발이 진입할 여지도 열어놓았다.

지난 촛불집회는 이처럼 새로운 균열과 배제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비폭력은

---

26) 초기에 지식인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의 조력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은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가운데 생존자들만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을 주도해나가고 있다(임미리 2019, 183~185).

정치적·사회경제적 변화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균열로 인한 5 대 95의 정치 구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물리적 전선에서는 공권력의 자제 및 후퇴, 추상적 전선에서는 균중의 폭력적 열기의 소멸과 박근혜 1인을 제외한 적의 비가시화가 광장의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경찰의 실탄 발사와 함께 무장에 나선 홍콩 시민들처럼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광장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그때는 다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가권력에 맞서 하나가 돼 저항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새롭게 분출됐던 서로 다른 목소리도 다시금 통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비시민의 공존, 차이가 은폐되지 않은 하나의 전선은 과거보다는 미래, 동일한 '우리'보다는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서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 동일성은 배제를 낳지만, 다양성은 구별과 통합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나 비폭력이나가 아니다. 지난 촛불집회로 표출된 다양성이 시민성으로 포장돼 또 다른 억압과 배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인정과 포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XXXX~~

## 참고문헌

- 고원. 2017. 『촛불 이후: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 한울.  
 김소진. 1993.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솔.  
 김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 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

- 문화연구』 29(2). 419-453.
- 김정환. 2011. “폭력과 저항: 발리바르와 지젝.” 『사회와 철학』 21. 363-390.
- 노형일·양은경.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통치 분석.” 『한국방송학보』 31(3). 5-4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 2017. 『촛불의 기록 I』.
- 서영표. 2017.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 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4(1). 65-90 .
- 스피박.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역. 그린비.
- 아렌트. 2011.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 불복종. 폭력론)』. 김선욱 외 역. 한길사.
- 우지안. 2018. “미투. 살아남은 자리에서 말하기: 배제와 연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95. 74-99.
- 이관후. 2017.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시민사회와 NGO』 15(1). 39-77.
- 이재철. 2017. “2016년~2017년 촛불집회의 정치적 항의- 수도권 유권자 분석.” 『사회과학연구』 24(4). 61-82.
- 이향우. 2012.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 2008년 촛불시위.” 『경제와 사회』 90. 244-74.
- 임미리. 2017.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 오월의 봄.
- \_\_\_\_\_. 2019. “짐승에서 인간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 및 실천의 의의.” 『경제와사회』 123. 182-218.
- 천정환. 2017.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2016/17년 촛불항쟁의 문화정치와 비폭력·평화의 문제.” 『역사비평』 118. 436-465.
- 최재훈. 2017.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113. 66-99.
- 최종숙. 2018.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조직

의 역할”, 『사회와 역사』 117. 7-43.

허철·한우리. 2010. “보여주기의 문화정치학 촛불집회. 퍼포먼스. 수행적 정체성.” 『평화연구』 18(2). 41-83.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2013. 『살아남은 아이들의 낮은 목소리』.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홍덕화. 2014.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 저항 사건 분석 (protest event analysis)을 중심으로.” 『ECO』 18(1). 151-186.

미디어자료

경남도민일보. 2016/12/05. “[옴부즈맨 칼럼]촛불과 정치적 상상력.”

경향신문. 2014/05/20. “시민사회 “경찰이 교보문고서 책 산 뒤 귀가하던 시민까지 연행.”

국제신문. 2017/01/12. “박종철은 촛불의 씨앗…민주주의 완성할게요.”

동아일보. 1980/05/16. “시위대열 속 청년 버스 탈취 돌진. 전경대원 1명 사망 4명 중상.”

머니투데이. 2017/01/08. “새해 첫 촛불집회도 ‘평화’. 입건자 0명 기록 8주째.”

문화일보. 2016/12/23. “〈시론〉가짜 보수·진보를 끝낼 때다.”

서울경제. 2017/01/20. “‘이석기 구명’ ‘한상균 석방’…‘정치적 구호’에 흔들리는 촛불.”

연합뉴스. 2016/12/05. “옛 통진당 김기춘. 현재에 정당 해산 지시… 정치보복.”

조선일보. 2016/12/05. “‘시민혁명’ ‘재벌 해체’ ‘구속’… 투쟁 언어 쏟아내는 야 대선주자들.”

\_\_\_\_\_. 2016/12/16. “[박정훈 칼럼] ‘대중의 분노로 작두에 올라타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2016/12/24. “촛불집회 등장한 ‘이석기 석방’ 목소리…‘촛불정신

왜곡하면 안 돼.”

- 한겨레. 2016/11/06. “현 시국 4·19혁명·1987년 6월 항쟁 때와 비슷하다.”
- 한국경제. 2016/12/29. “[사실] 광장의 촛불은 결국 좌경화 이념의 교두보였던가.”
- 한국일보. 2016/11/24. “‘박근혜 하야’ 100만 촛불 속 여힘 발언 몰아내기.”
- MBC 뉴스. 2016/12/31. “수백만이 광화문 광장으로. 변화 이끈 ‘촛불’ 물결.”
- TV조선. 2016/11/12. “[정치분석] 4·19 혁명·6월 항쟁과 비교하면?” 하단 자막 20:03.
- \_\_\_\_\_. 2016/11/12. “[정치분석] 4·19 혁명·6월 항쟁과 비교하면?”
- \_\_\_\_\_. 2016/11/12. “김성태 ‘분노의 민심 느껴…못한 정권.’”
- \_\_\_\_\_. 2016/11/19. “[뉴스 특보] 지지율 5%…‘샤이 박근혜’는?” 하단 자막 14:42.
- \_\_\_\_\_. 2016/11/26. “[긴급진단] ‘혼돈의 정국’…박 대통령 선택은?” 하단 자막 20:15.
- \_\_\_\_\_. 2016/12/03. “[뉴스판] 내주 정치권 주요 일정 뭐가 있나?” 하단 자막 20:08.
- \_\_\_\_\_. 2016/12/03. “100m 앞까지 온 촛불…청. 퇴진 시기 고민.” 하단 자막 21:58.
- \_\_\_\_\_. 2016/12/03. “청와대 앞 시민들. 애국가 4절까지 완창.”
- \_\_\_\_\_. 2016/12/03. “현재 전국 집회 관련 경찰 연행자는 ‘0.’”

**Abstract**

**A Study on the Two Fronts of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2017**

**Lim, Mi R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Phyx, Research Fellow

Considering that candlelight vigils are not only nonviolent but also law-abiding,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this nature of the candlelight vigils held from 2016 to 2017 in terms of their physical and abstract fronts. Nonviolent and law-abiding candlelight vigils were possible du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istance movements and the changes in the fronts caused by the fissures in the ruling party. Specifically, on the physical front, public authorities restrained or retracted themselves under the divided ruling party, while the violent heat of the crowd dissipated on the abstract front as the enemy dissipated from visibility, leaving only Park Geun-hye in sight. The nonviolence and law-abidance of the candlelight vigils eliminat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hysical and abstract fronts, transforming the protests into a festival. But, at the same time, this transformation silenced the voices of the protestors who had come to fight with their lives and ostracized the non-citizens from the grounds, reserving the space only for the citizens. However, the 2016-2017 candlelight vigils also presented new possibilities. The feminist front, which had gained increased visibility due to the controversy over misogyny, had caused a crack in unified order but also proved that groups with different agendas

could join forces together. Moreover, although the space occupied and reserved for the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candlelight vigils excluded the fragmented urban lower class, the vigils also opened a window for them to join the forces by demonstrating the coexistence of various fronts.

■ **Keywords:**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2017, Physical Front, Abstract Front, Controversy over Misogyny, Urban Lower Group.

투고 : 2019/10/01 심사 : 2019/10/16 확정 : 2019/11/25